

도내 경제 기관장 총집합

지역경제 활성화 논의 세계잼버리대회 등 기관별 협력방안 모색

전북도는 도내 주요 경제관련 기관 장들이 한자리에 모여 각 기관에서 추진하는 주요시책에 대해 논의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협력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민생경제원탁회의를 개최했다.

14일 전북도에 따르면 한국은행 전북본부에서 진흥 정부부지사 주재로 도내 경제관련 기관장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각 기관들이 추진하고 있는 주요 시책에 대한 안내 및 홍보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도는 지역 및 국가브랜드 제고효과 등 전국적으로는 7조, 전북에는 약 4

조원의 경제적 효과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되는 '2023 세계잼버리대회' 유치현황과 향후계획, 스포츠 초월한 청년채용문화 확산을 위해 추진하는 지역인재 공개오디션인 '잡영캘린저' 사업 등에 각 기관이 적극적으로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군산지방해양수산청(청장 홍상표)은 군산~청도 항로(2017.2월) 및 르자오항로(2017.5월)에 이어 연운 위해항을 운항하는 컨테이너 항로(2017.8) 등 신규항로 개설로 전년대비 컨테이너 화물 물동량이 전년동기대비 124%증가, 지역경제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전북지방노동청(청장 임종식)에서는 임금체불 및 최저임금 지급을 위한 산업주 등 주요 노동관계법 위반업체에 벌금이 부여되고, 정규직·비정규직 사용비중에 따라 일할가·감점 부여하는 등 고용·노동 분야 위법 기업 등에 일할 벌이의 부

여를 통한 공공조달을 통한 일자리 지원계획을 강조했다.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조속 추진 협조, 한국산업인력공단 전북지사에서 근로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에 소모되는 일부 비용을 사업주에게 지원해주는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훈련 지원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등 각 참여기관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민의 생활 안정을 위해 추진하는 주요 추진시책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져 상호간의 공감대를 형성했다.

진흥 전북도 정부부지사는 2023 세계잼버리대회 유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준 도내 경제유관단체에 감사사를 표하며, "전북지청의 시대를 열어갈 수 있는 중요한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 활발한 소통과 교류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참여기관의 적극적인 노력과 협력"을 당부했다. /김진성 기자



상용차 복합 거점 개소
될 예정이다.

14일 엑시언트 스페이스 개소식이 열렸다. 이번에 개소한 '엑시언트 스페이스'는 현대자동차가 작년 11월 개소한 '엑시언트 스페이스 제천'에 이은 두 번째 현대 상용차 복합 거점으로서, 전북을 비롯한 호남지역 고객들과 소통하고 지역사회의 연계를 통한 상생의 공간으로 운영 (관련기사 10면)

스타 소상공인 성공 향한 '날갯짓'

전북도, 공개오디션 통해 3개 업체 최종 선발

전북도 '스타 소상공인' 공개오디션이 14일 전북도청 대회의실에서 있었다.

국내 최초로 전북도에서 2012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도내 도민 평가단 130명과 전문심사위원 6명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스타 소상공인' 공개오디션은 도내 우수소상공인을 발굴하여 성공모델로 육성하고자, 지난 3월부터 전라북도, 전북경제통상진흥원, JTV 등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진행하였으며, 공개모집을 통해 참가 신청한 21개

업체를 서류심사, 현장심사, 발표심사 등 3차의 예선 심사를 거쳐 본선에 최종 진출한 6개 업체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날 공개오디션은 업체별로 동영상을 상영, 대표자 발표 및 전문심사위원의 질의응답 순으로 심사가 이루어졌으며, 전문심사위원 6명과 도민 평가단 130여명이 업체별 아이템 경쟁력과 차별성, 성장 가능성에 중점을 두고 평가하여 최종 순위를 결정하고, 3개 업체를 선발했다.

최종 '스타 소상공인'으로 선발된

3개 업체는 마케팅, 시설 개보수, 시스템 개선 등의 사업비로 2천만원, 1천5백만원, 1천만원의 시상이 지급되며, 본선 오디션에 참가한 6개 업체는 전북신용보증재단의 저금리 특별보증으로 업체당 3천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송하진 도지사는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우수 소상공인을 발굴하고 성공모델로 발굴하는 큰 보람을 느낀다"며, "전북도에서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전을 위해 각종 자금의 보증을 강화하고 이차보전은 물론,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과 컨설팅도 병행하여 더 많은 스타소상공인이 탄생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도 공무원 우수제안 6개 선정

사업성 검토·보완 후 사업구체화 도정반영 및 국가예산 확보 추진

전북도는 13일 도청 영상회의실에서 2017년 공무원 제안 본심사를 개최하고 우수제안 6건을 최종 선정했다.

본심사에서는 연초에 실시한 특별공모와 4차산업혁명명을 주제로 한 테마공모에 접수된 총 50건의 제안에 대해 실무심사위원회를 거쳐 선정된 10건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졌다.

공모에 참여한 공무원들은 특별회의와 사업현장 방문을 통해 자료

를 수집하고 아이디어를 모아 우수한 제안을 발표하며 치열한 경쟁을 펼쳤다.

본심사는 실현가능성, 창의성, 효과성 등 심사기준에 의거 관련 실·국장, 외부전문가 등이 참여한 가운데 이루어졌으며, 최우수 1팀, 우수 2팀, 장려 3팀 등 총 6팀이 최종 선정됐다.

최우수 제안팀에게는 상금 150만원과 국외연수 특전을, 우수상 2개

팀에는 상금 각 100만원, 장려상 3개 팀에는 상금 각 50만원이 주어지고, 채택된 팀원 모두에게는 직무성과 가정 및 상시학습 20시간이 부여된다.

우수제안으로 선정된 사업들은 실무부서의 타당성 검토 및 보완, 연구역량을 통한 사업구체화 등을 거쳐 도정에 반영하고 향후 국가공모사업에 참여하는 등 예산확보로 이어 나갈 계획이다.

도 최병관 기획조정실장은 "공무원 제안이 복잡·다양한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기 위한 행정문화로 자리매김해 나가고 있다"면서, "우수한 제안을 정책화하여 도민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문재인 대통령 세계시민상 수상

민주주의 발전 공로 인정받아... '춧불혁명 국민계 영광'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의 국제전문 싱크탱크인 아틀랜틱 카운슬(Atlantic Council)이 주관하는 2017 세계시민상(Global Citizen Awards)을 수상한다.

아틀랜틱 카운슬은 14일(현지시간) 홈페이지에 올린 세계시민상 수상자를 공개하면서 문 대통령, 저스틴 트뤼도 캐나다 총리, 중국 피아니스트 랑랑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2010년 제정된 세계시민상은 대서

양 연안 국가 관계 증진에 역량을 발휘하고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 글로벌 리더들에게 주어진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이 상은 제 개인에게 주는 상이 아니라 춧불혁명명으로 민주주의를 지켜낸 한국 국민에게 드리는 것이라고 본다. 국민께 감사드리고 영광을 돌린다"고 수상 입장을 밝혔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아틀랜틱 카운슬은 문 대통령에 대

해 "적폐를 근절하는(eradicating deep-rooted problems) 강도 높은 개혁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북핵 위기 대응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력들을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18~22일 유엔(UN) 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을 방문하면서 세계시민상 시상식에 참석한다.

아틀랜틱 카운슬은 매년 유엔 총회가 열리는 주간에 저녁 만찬회를 겸한 시상식을 연다.

이 시상식에는 수상자뿐 아니라 미국 주요 당국자들, UN 외교관, 국제 기업인, 유명 음악인들이 참석한 다. /뉴시스

사립유치원 불법휴업 엄정 대응 교육부, 범부처 협력 필요 강조

교육부가 사립유치원 불법휴업에 대해 엄정대응 의지를 밝히고, 사립유치원 휴업에 대비해 관계부처와 시·도 교육청, 지자체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춘란 교육부차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시·도 교육청과 복지부, 여가부, 경기도청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사립유치원 휴업 관련 대책 회의를 열었다.

우선 박 차관은 "한국유치원총연합회와 예고한 휴업은 불법이며 유아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학부모의 불편을 초래하는 휴업을 강행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정부가 엄정대응 하겠다"고 밝혔다.

또 "시·도 교육청에 사립유치원의 휴업 철회를 요구하는 시정명령과 휴업 강행을 대비한 행·재정적 조치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박 차관은 사립유치원의 휴업에 따른 맞벌이 가정 등 학부모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도 교육청과 복지부, 여가부(시·도청) 간 협력을 강조했다.

그는 "사립유치원이 예고한 1차 휴업(18일)뿐 아니라 추석연휴 직전 2차 휴업(25~29일)이 강행될 경우에 철저

히 대비하기 위해서는 범정부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도 교육청은 현재 공립유치원, 유아교육진흥원 등을 통해 돌봄이 필요한 유아를 수용할 계획이지만 만약의 수요를 대비해 지자체 국공립 어린이집과 여성가족부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활용하기로 했다.

복지부와 여가부는 시·도 교육청과 협의해 돌봄이 필요한 지역을 파악한 후 지역별 협의를 거쳐 학부모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박 차관은 "사립유치원의 임시휴업이 불법임을 당사자들이 깨닫고 교육현장으로 돌아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뉴시스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jmaeil.com